

대형 붕괴 참사…사고는 한순간, 처리는 하세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한달

경찰·노동청 수사 진척 없고
입건 대상자 수조차 확정 못해
중대재해법 책임 범위도 정리 안돼

화정아이파크 참사 4년

유가족-시공사 갈등 봉합 안돼
“추모사업 지원 끊겼다” 호소 속
올해 4주기 추모식 따로 개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이 붕괴돼 작업자 4명이 유명을 달리한 지 1개월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나도록 경찰·노동청 수사는 크게 진척된 게 없고 사고 원인에 대해 밝혀진 것도 없는 '깜깜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한 달이 지난 현재도 경찰은 구체적인 입건 대상자 수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오죽하면 “입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현재까지 입건한 인원 수조차 차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놓는 수준이다.

경찰은 다만, 사고 직후 붕괴사고 수사본부를 꾸리고 지난달 16일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노동당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의 대표와 현장소장,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각 1명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자에 대해선 사고 직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해 진행했으며, 실제 법 위반으로 성립하는



지난달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시 서구 내방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 상판의 콘크리트 더미가 바닥으로 내려 앉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와 추가 하도급 업체들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수사가 향후 6개월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진행 중인 원인 조사 결과가 6개월여 걸릴 것으로 예상돼 사건에 대한 윤

과가 오는 5·6월께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조사가 나온 뒤에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점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책임 범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수사·노동당국 입장이다.

광주시도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으로 꼽히는 안

전 관리계획서, 감리보고서 등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미루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감리·시공사 등 제3자가 '수사 중'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지만 사고 발생 이후 2개월 기까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극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광주시가 사고 직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부서TF를 만들고 유가족 지원과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광주 지역의 다른 건설현장 전수조사(51곳)를 하고 장례절차를 지원한 것 외에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희생자 4주기 추모식’이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인근 상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열린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어렵게 됐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4주기 추모식은 유가족과 시공사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추모식을 여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붕괴사고 이후 재시공 중인 ‘광주센테나일 아이파크’ 현장에서 내부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추모식을 열었다.

반면 희생자 유가족협의회는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인근 상가에 관내 산업체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사고 당일인 11일 별도의 추모식을 염수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중대재해 반복시 지방공공기관장 해임 요구 가능

경영평가, 안전 관련 비중 확대 행안부, 가이드라인 개정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될 경우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발주 사업에서 조차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라 만들어졌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등에 명시

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으로, 노후 시설·장비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고,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공시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도 추진한다.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안전 관련 항목의 비중이 커진다.

안전 분야 평가 배점은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이 부여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운명은? … 이번 주 재판 잇따라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

16일 ‘체포 방해’ 혐의 첫 선고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과 ‘체포방해’ 혐의 첫 선고 등 재판이 이번 주 중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근 전 제3야전군사령부 현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장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서증조사에 8시간 넘는 시간을 사용하는 등 재판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결국 13일로 기일을 미뤘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이 재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 중 내려질 예정이다.

오는 16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중 처음으로 내려지는 사법적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고, 국무위원의 비상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작성 했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pon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밖에도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한 일반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 첫 공판이 열리며,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 한 전 총리의 견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첫 공판준비 기일이 열린다.

14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